광주시, 조직개편으로 '눈에 보이는 변화' 이끈다

민선 8기, 미래산업·교육·군 공항 이전 등에 초첨 맞춰 진행
군공항 이전본부 신설…인공지능산업실·교육정책관 격상
상수도·종합건설·도시철도건설본부 현장역량 강화안 마련

민선 8기 광주시가 미래산업 육성·교육정책 전환·군 공항 이전 추진에 초점을 맞춘 조직개편으로 '눈에 보이는 변화'의 가속페달을 밟는다.

광주시는 1일 "조직개편안 입법예고를 거쳐 광주시의회 정례회에 조례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본청 조직은 '14 실·국·본부' 포함 73과에서 군공항이전본부가 신설되고 1과가 줄어, '15 실·국·본부' 72과로 변경된다. 군공항이전본부장(3급) 직위가 추가되면서 총 정원은 1명 늘어 4197명이 된다.

광주시는 미래산업 경쟁력을 키우고 고부가가치 산업구조로 전환을 주도하고자 인공지능산업국과 경제창업실을 개편한다. 인공지능산업국은 인공지능산업실로 격상해 인공지능, 반도체, 미래 모빌리티 등 산업을 집중 육성하는 역할을 맡는다.

경제창업실은 창업기업 자금지원, 실증, 판로 개척 등 연계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상생 일자리 확산 기반을 마련하는 기능으로 조정해 경제창업국으로 바꾸고, 급변하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기후환경국을 재편해 탄소중립과 물관리 총괄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여성가족교육국에 있던 인재육성과는 교육정책관으로 확대된다.

광주시는 특히 광주·전남 최대 현안으로 떠오른 군 공항 이전의 중요성을 고려해 군공항교통국에 있던 군공항이전과를 본부로 승격한다.

또 전국 최초로 시행 중인 '광주다움 통합돌봄'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복지정책과를 돌봄정책과로 명칭을 바꾸고 전담팀도 신설한다.

기획조정실에는 데이터정보화담당관, 여성가족국에는 외국인주민과, 경제창업국에는 농업동물정책과를 설치해 해당 분야 업무를 강화한다. 국내 외국인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외국인과 이주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국내 정착지원과 문화 다양성을 총괄하는 외국인주민과도 신설 운영한다.

시 산하 기관도 체질 개선에 들어간다.

상수도 사업본부, 종합건설본부, 도시철도건설본부 의사결정 구조를 현행 부장(4급)-과장(5급)-팀장(6급)-실무자(7급 이하) 등 4단계에서 5급 팀장제를 적용해 부장(4급)-팀장(5급)-실무자(6급 이하)로 간소화한다고 광주시는 설명했다.

배일권 광주시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개편은 광주발전 대전환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산업·교육 분야의 뿌리를 튼튼하게 하고, 군공항 이전이라는 새로운 발전 기회를 창출하는 조직으로 강화하는 게 핵심"이라면서 "시민생활에 밀접한 현장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조직으로 혁신함으로써 통합돌봄 사업 확대, 기후변화에 맞는 체계적 물관리, 데이터 기반 행정시스템, 전문인력이 빠르게 현장에 대응하는 상수도·도시철도·종합건설본부를 만들어 내겠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전남도-국회입법조사처 "지방소멸 위기 함께 극복하자"

도청서 토론회…기금 확대·공공기관 이전 등 대응 방안 논의

전남도가 국회입법조사처와 함께 1일 도청 왕인실에서 지방소멸 위기 극복 정책화 및 입법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한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전라남도 지역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영록 전남지사, 박상철 국회입법조사처장, 김태균 전남도의회 부의장, 관계 전문가와 도민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주제발표와 지정토론, 자유토론 등으로 운영해 분야별 지역소멸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주제발표에 나선 김대성 전남연구원 위원은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전남도 대응 방안'발표를 통해 수도권과 비수도권이란 이분법적 시각에서 벗어나 비수도권에서도 도시와 농어촌 유형을 세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전남도 지역토론회가 1일 오후 도청 왕인실에서 열린 가운데 김영록 전라남도지사, 박상철 국회입법조사처장, 이병운 순천대 총장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전남도 제공〉

박민정 이민정책연구원 교육센터장은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지역 이민정책 추진방안'을 주제로 국내 체류 외국인이 노동 인력 중심에서 정주형으로 변화하고 있으므로 지역사회 통합을 위한 지방정부 역할 강화를 주문했다.

이병운 순천대 총장을 좌장으로 한 자유토론에서는 정광선 전남도 인구청년정책관이 '지방소멸대응기금 확대 및 개선', 박경현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이 '공공기관 이전과 지역발전 과제', 신동훈 전남연구원 지속가능공간연구실장이 '균형발전지표 확대 적용 및 개선 필요', 이찬영 전남대 경제학부 교수가 '지역 특화인재 사업의 현황 및 함의', 하혜영 국회입법조사처 행정안전팀장이 '지방소멸위기 대응을 위한 입법동향 및 향후 과제'를 발표하고 참석자와 논의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4월 '지방소멸 대응연구 전담조직(T/F)'을 발족하고 오는 8월까지 자체 연구를 추진, 전국 시·도를 순회하며 분야별 전문가 토론회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다.

김영록 지사는 개회사를 통해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문제는 지역이 스스로 풀 수 없는 문제"라며 "지방이 스스로 다양한 지역특화 정책을 제대로 펼치도록, 국가정책과 입법의 틀을 지방 중심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밀실 운영' 광주도시계획위 시민 참여 확대를"

정다은 광주시의원 토론회 열어

그동안 '깜깜이 밀실 운영' 논란 등이 있었던 광주시 도시계획위원회의 혁신을 위해서는 회의 공개와 시민 참여기회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일 광주시의회에서 '도시계획위원회 운영과 혁신'이라는 주제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류중석 교수(중앙당 도시공학과 명예교수)는 "미국 뉴욕과 시카고시, 영국 런던시 도시계획위원회는 회의 일부를 생중계 또는 포털을 통해 공개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

류 교수는 "현재 도시계획위원회는 과도한 심의 지연 및 반복 심의 등으로 안건처리 기간이 지연되거나 위원들의 장기 연임으로 인한 이해관계자와의 유착 등이 민원 등으로 많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회의 공개를 통해 공정성을 확보하고, 시민들의 눈높이에서 안건을 검토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박종렬 경실련 자치분권위원장도 발제를 통해 "도시계획위원회가 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광주시의회가 도시계획위원회 조례 개정에 발 벗고 나서야 한다"면서 "시민단체와 전문가가 제안한 조례개정안에 대한 적극적인 논의가 이뤄져 올해는 조례가 개정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정다은(민주·북구2) 광주시의원은 " 도시계획위원회를 통해 수 조원의 사업자들 이익이 결정되고 있지만 시민들의 알권리는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며 "대규모 개발이익 및 시민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기구인 만큼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해야 하고, 시민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지방정가 라운지

"대형 참사 막을 방지 대책 보완해야"

박미정 광주시의원

광주시의회 박미정(민주·동구2) 의원은 1일 "광주 학동 재개발 철거건물 붕괴사건 이후에도 대형 참사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민간 건축공사의 '휴먼 에러(human error)'를 막을 방지 대책이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날 열린 제317회 제1차정례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해초 광주 화정아이파크 신축공사장 붕괴에서 보듯 이러한 제도적 장치가 실제 현장에서 작동하지 않는 휴먼 에러의 문제가 건설현장에 똬리를 틀고 있다"면서 제도 보완을 촉구했다.

그는 "전국 건축허가 5만5417건 중 4만4001건(80%)은 여전히 건축주가 직접 감리인을 지정하는 상황"이라며 "감리자가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고, 건설현장의 품질관리를 위해 상시 모니터링 체계 구축, 교육·품질 지도점검 등을 실시해 상주 감리의 단점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부실공사 불법 근절을 위해 위법행위로 얻어진 경제적 이익 환수 등의 강력한 방안 마련도 필요하다"면서 "특히 전문인력 추가 채용 등을 통해 광주건축안전센터의 기능과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박 의원은 이날 5분 발언에 앞서 학동 참사 2주기를 맞아 고인들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 고통에 깊은 위로를 표했다. /최권일 기자 cki@

"호남고속도로 서광주 IC, 운암IC로 명칭 변경해야"

심창욱 광주시의원

광주시의회 심창욱 의원(더불어민주당·북구5)은 1일 "서광주IC라는 지명을 두고 혼선이 있어 기존 호남고속도로의 '서광주IC'를 '운암IC'로 명칭을 변경해야 한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이날 열린 광주시의회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방위상 서로 맞지도 않아 시민은 물론 외지인들에게도 불편을 끼치고 있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심 의원에 따르면 제2순환도로에 개설된 19개 IC 중 서광주역을 드나드는 서광주역IC가 편리상 서광주IC로 불리면서 호남고속도로 나들목인 '서광주IC'와 명칭을 두고 혼선이 초래되고 있다.

호남고속도로 서광주IC 명칭은 1973년 서광주요금소(TG) 개통과 함께 붙여진 명칭으로, 당시의 인구와 면적, 시대 상황은 50년이 흐른 현재와 크게 달라 시류에 맞춘 명칭 변경이 필요하다는 게 심 의원의 주장이다.

심 의원은 "그동안은 지명을 변경할 때 관할 구청 건의로 시청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국토부에 건의하면 국토부가 승인하는 방식이었지만 올해 7월1일부터는 법률 개정으로 국토부 승인절차가 없어져 집행부 의지만 있다면 어렵잖게 변경할 수 있게 됐다"고 덧붙였다. /최권일 기자 cki@

71 광주일보 71년
호남 최대 부수
열독률 호남 1위